

고독의 시대 극복, 정치가 나설 때다

의정단상

강수훈

광주시의원



고독사!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극단적 선택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연말 처음으로 우리나라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년간 광주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551명으로 매년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식된 고독사는 최근 중장년층 뿐 아니라 청년층의 사례도 점차 늘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고독사 사망자 3378명 가운데 30대 이하도 219명으로 6.48%나 됐다.

전통적인 가족관계망의 급속한 붕괴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나이를 막론하고 혼자서 거주하다가 고독사로 연결될 개연성이 매우 커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나아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청년 실업이 심각해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고 도태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일상의 몰락이 고독사로 직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고독사

의 심각함을 미리 예견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8년부터 '외로움부서'를 신설해 연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고, 일본은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해 외로움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며 외로움을 예방하고, 고독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있다.

광주지역에서도 지난 5년간 551명의 고독사가 있었던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풀뿌리 지방정부와 자치분권 2.0을 이야기하는 지금,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150만 도시 광주에 생명과 온기를 불어넣을 우리 공동체만의 고독사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주에서 실시한 '엄마의 밥상'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보자. 전주시는 2014년부터 아침밥을 굶는 어린이들에게 매일 아침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업 초기에는 '성장 위주와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사람 우선과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단장의 철학과 의지에서 시작해 관 주도 예산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그 뜻과 비전에 공감하고 감동한 시민들이 세상에 희망과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하겠다며 후원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엄마의 밥상' 프로젝트는 한 지역 정치인의 관점 전환으로 지방자치의 변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정해져 있는 한정된 자원으로 부자와 강자를 대변하지, 서민과 약자를 대변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다. 그렇다면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가난하고 힘없는 부모님을 만났다고 해서 외로운 삶을 살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우연한 요소로 생활의 질이 다르지 않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은 정치다.

고독사 문제를 분석하면서 미국 경제대공황을 뉴딜정책으로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떠올렸다. 가난을 구제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한 용기 있는 지도자를 생각하며 가슴이 뛰었다.

광주에서도 선포해야 한다. '여러분의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주가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갑자기? 아니다. 사람들이 정서적인 신뢰를 하지 못해서 단절감을 느끼고 시민들 간의 유대가 사라진다면, 결국 공동체가 자신을 보살피지 않는다고 느끼게 돼 사회는 분열되고, 양극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급기야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에서 '외로움 극복 도시'를 표명하고, 고독의 시대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다.

社說

개탄스러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정의·공정 관점에서 판단해야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안은 재판관을 통해 증거와 법리로 다투어야 할 일이지만 정치권의 불명예이자 정치사의 오점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참담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성남FC의 흑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액수를 약 4895억 원대라고 기재했다.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극히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며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이재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법이 아닐 경우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오는 24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규정한 사안이다.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한 예외적 '특권'이 아니고 행정부에 의해 국회의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삼권분립의 취지다.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은 헌법을 지키는 헌법기관의 신성한 의무로 사법절차상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당파의 이익도 떠나야 한다. 검찰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불편부담을 담보해야 한다. 검찰과 정치권의 일거수 일투족을 국민 모두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윤상원열사 유족 '정신적 피해' 승소 환영

늦었지만 위안되기를

5·18 민주화운동때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가 계엄군의 총탄을 맞고 산화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신봉매 부장판사)는 윤 열사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각 청구한 금액의 36.8%~39%(고유 위자료+상속액)를 인정, 윤 열사 어머니에게 3억 2000만원, 형제·자매 6명에게 각 2333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정당하게 맞선 윤 열사가 군의 계획적인 살상 행위로 숨졌고, 국가는 윤 열사와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상원 열사는 1980년 5월 민족민주화 대성회·민주수호 범시민 쉼터대

회 주도, 투쟁위원회 조직 등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으며, 시민군 대변인으로 5·18학살 현장의 진상을 세계에 알렸다. 그는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하다 계엄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윤상원 열사에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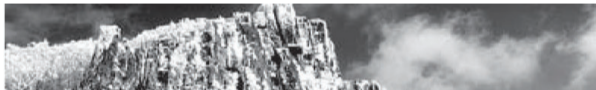
이처럼 정부가 민주화와 노동운동 등에 헌신한 그와 유족에게 당연한 예우를 한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가족이 죽음을 당한 것도 모자라 오랜동안 폭도 누명까지 뒤집어 쓴 채 지내면서 겪었을 한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서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에 비한다면 위자료는 미흡하고 소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유족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윤상원 열사 유족의 경우처럼 5·18 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합당한 판결이 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특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전남일보 e-mail webmaster@jnilbo.com

전화 (062)510-0321

서석대



5·18민주화운동 일부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가 추진하는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의 '용서와 화해' 대국민 선언과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를 놓고 지역 사회가 논란에 휩싸였다. 재야 민주 인사와 시민사회단체는 진상규명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행사에 우려를 나타낸 반면, 행사 주관 5·18 단체는 이번 행보가 진상규명으로 다가가는 첫 걸음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5·18 가해자와 피해자간 화해 수순에는 동감하나 특전사 단체의 미흡한 진상규명 의지, 진정성 없는 사과 우려 등을 이유로 행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게 행사 반대측의 입장이다. 이 같은 비판 등이 일자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광주 행사에 불참기로 했다. 유공자유족회는 지난

가해자와 피해자 라포형성

총 9회의 조사가 있었으나 상급 지휘관 중심의 조사에 그쳐 발표 책임자의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위에서부터'가 아닌, 말단 병사와 초급 간부들을 포함한 '아래에서부터'의 조사를 통해 발표 현장의 생생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명실상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행사 반대측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으나 논란과 갈등보다는 5·18 진실 규명에 전력투구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계엄군으로서 광주에 투입된 이들 역시 부당한 국가권력의 희생자로 볼 수 있다. 40여년 동안 조직과 자신을 포함한 가족 보호 명분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지만 이들 또한 60대 후반과 70대의 나이에 이르러 현역에서 은퇴했고 그날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본다. 특전사 소속 말단 병사와 초급간부중 누군가는 5·18 진실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제시와 증언을 해주는 스모킹 건(smoking gun)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입을 다물거나 혹여 죽게된다면 그런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뗏이 중헌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 때가 아닌가 싶다. 이기수 논설실장

달 16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계엄군이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을 다

1980년 5월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로 적대적 관계였던 양측이 나란히 희생자를 기린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19일 국립5·18민주묘지 합동 참배는 양측이 사전 예고한 행사였지만 5·18 단체간 균열이 생긴 셈이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5월 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전사 동지회와의 만남이 5·18 진상규명의 시작"이라며 "만남을 이어가 신뢰를 쌓는다면 (이들이) 1980년 5월 당시에 기록한 메모나 일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에 근거한 암매장 장소도 확인할 수 있고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이번 합동 참배 등 행사는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계엄군들이 스스로없이 사회로 나와 양심고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진실 규명에 라포(rapport)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로 보인다. 라포는 '다리를 놓다'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기원한 말로,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